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3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주택도시기금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주택도시기금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2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

사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해야 할 국토부 총예산은 62조 5000억 원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면 국토 분야 292개, 교통 분야 370개입니다. 특히 오늘 심사 대상인 국토 분야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74개의 세부사업, 126개의 내역사업이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측 및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7분)

○소위원장 전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차량 3대의 임차료 5500만 원 감액 의견과 임차료 감액에 따른 유류비 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2번,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결성액 526억 원 중 150억 원은 미투자되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투자 시기를 고려한 예산 반영을 위하여 1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AI 관련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과 불확실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46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예산액의 절반 수준인 230억 원 감액 의견 및 동 사업과 도로국 소관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을 통폐합한 예산 880억 원의 50%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용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관리 부적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임차료와 유류비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차관,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서울과 세종으로 전용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대는 전용차량이지만 나머지 또 3대는 관용차량에 전용 기사가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전용 기사가 착각을 해서 관리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임대보다는 구매를 하라 이런 지적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구매보다는 리스가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리스 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차료와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관련해서는, 혁신펀드가 모자펀드로 나뉘어 있어서 그중에서 자펀드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호 펀드와 3호 펀드의 집행률이 좀 부진하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3호의 경우에도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액을 안 하고 정부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AI응용제품 상용화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십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다음 통폐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대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까지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침이라든지 절차 마련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모를 거쳐서 전액

집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통폐합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먼저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안 상정될 때 장관이 자기가 타고 있는 차량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교통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아봤는데 세종이나 과천에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에 없는 사례를 국토교통부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님 답변 과정 중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의 차량관리 규정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용 기사가 착각해서 일지를 쓰지 않는다고 그 기사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혀 반성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차량 세 대에 대해서 지속해서 임대하기도 곤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소속, 성함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타당한 지적도 있고 관리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 장관이 자기 관용차를 세세하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장관의 전용 차량은 업무에 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그런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장관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김희정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검혀서 받아들여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국토부장관이 또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장관님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원안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요. 이연희 위원님, 현행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관용차량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일반 총무실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고 장차관이 부당하게 사용했던 사례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용차량을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관 전용 차량을 그대로 쓰시고 운영지원과에 일반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쓰는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사실상 장관 차량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세 대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세 차례에 걸쳐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차량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부당하게 사용한 것, 그것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역시 이런 문제를 함에 있어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과논거야에 내놓고 어

겨 놓고서 일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사가 착각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운영지원과장은 뭐고 그 위의 장차관들은 뭘니까?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요? 어디다 대고 기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윤종오 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나중에 해요.

○김희정 위원 넘어갑시다.

○안태준 위원 아니, 이것은……

○윤종오 위원 이걸 있으면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안태준 위원 아니,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인 건 알겠는데요. 현행 보면 세종하고 이쪽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보면 차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여기 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뭘 탑니까? 직원들더러 직원 차량으로 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관 전속 기사 말고 다른 데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이걸 지적해서 부대의견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못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오히려 또 다른 불법을, 아니면 또 다른 규정 위반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해해 주시고……

○김희정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파악하고 말씀해 주세요.

○안태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에 왔는데 그러니까 장관 전용, 장관이 쓰는 차량을 배정을 했다는 걸 문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쓰는 차를 장관이 왔을 때마다 타고 다니라는 얘기는 또 아니실 거고요.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충분히……

○김희정 위원 어떻게 불법 운행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아니, 충분히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세종에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기고 쓰고요. 장차관 차량의 관리 규정과 일반 공무원 차량의 관리 규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등록은 장차관 차량으로 하지 않고 장차관 차량인 것처럼 쓰면서 차량 운행일지를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운행했고 운행일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위반입니다.

위반되게 운용되고 있는 차량을 손대자고 한 거지 장차관 차량을 없애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21대 등록된 차량 중에 위반되게 운용되고 있는 세 대 일체의 차량 운행일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장차관 차량은 차량 운행일지 없어도 상관 없어요. 그 세 대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관 차량도 아니면서 이런 차량 운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차량 세 대는 불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제대로 등록을 못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등록 못 한 차량을 없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저는 김희정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해주실 만큼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삭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김희정 위원 지적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관리 주체나 관리에 대한 것에 만전을 기하는 형태로 부대의견을 단다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일단 다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매우 미흡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제가 그러면 말씀을……

○**김희정 위원**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일부 기사가, 마치 위에서는 잘했는데 일개 기사가 며칠 동안만 잘못 운영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여기는 그러면 차관 답변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반성을 하고요. 그게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일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부대의견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하고 하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희정 위원님 그러면 안 됩니까?

○**김희정 위원** 이 정도 대답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보류하고요. 나중에 김희정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말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다음에 그러면 2페이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측에서는 수용……

○**김종양 위원** 이것 혁신펀드, 2번도 하는 것 아닌가. 2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위원장 전용기** 2번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1번 넘어가는 걸로 하고 2번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굳이 1번 2번 3번 안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번 하시면 됩니다.

○**김종양 위원** 2번 혁신펀드 있잖아요. 지금 현재 투자 집행률이나 아니면 미투자금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120억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혁신’ 그러면 모두 다 좋은 걸로 생각되고 또 너무 현 정부에서 펀드를 많이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통 관련해 가지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지만 지금 150억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

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120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 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억에 대한 집행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님 적극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150억 원을 쓰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종료사업입니다, 2호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펀드들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종양 위원 올 연말까지 집행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종양 위원 하여튼 교통분야의 혁신도 필요하긴 필요하고 혁신기술도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선 그럴 듯한 명분으로 예산부터 확보 하자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경각 차원에 지적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걸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넘어가고요.

3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있는데, 저도 조달청장 할 때 서울하고 대전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정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이삼 일 있고 나머지 삼사 일 정도는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을 때는 지방 차가 있어야 되고,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본 차량이고 서울이 저기 차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리고 공용차량을 청장이 아니면 장관이 일부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빼놓고, 차량 운영일지나 이런 데다가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써도 되는데 그걸 굳이 조금 불편하다고 내지는 그걸 숨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행여나 그 차량 기사나 차량을 장관님 전용으로 그리고 장관님 안 계실 때도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정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나머지 비는 시간은 공용으로 다른 직원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잘 설명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적할 게 많은데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2020년 결성된 건데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150억 지적하니까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잘 설득은 안 되거든요. 그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다음에 AI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 전 부처 공통인데 지금 사업 준비가 굉장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제 수요조사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면 수요조사 하고 세부적인 지침, 조건 이런 것 다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공모까지 다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정부 전체가 늦었잖아요, 그렇지요? 부랴부랴 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 진행이 늦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예전에 다른 펀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문제인 정부 시절에 뉴딜펀드, 그때도 지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전 부처가 다 했고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중복 문제, 예산 낭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끝이 안 좋았지요.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근거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요구한 것의 한 반 정도로 해서 출발하고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에 전폭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의견 없으십니까?

○이연희 위원 이종욱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개 부처 합동 사업 이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감액되면 전체 타 부처 사업도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필요성 특히 수요 같은 것이,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수요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산 과정에서 검토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수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국민의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은 수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통합은.

○소위원장 전용기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데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수용을 해 주신다는데 AI 예산은 우리가 늦게 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저도 국토부가 AI를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정신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자칫 준비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더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의 길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현재 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증도 없었을뿐더러 지원대상 선정이라든지 지원대상 방법이라든지 상용화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년 3월까지 지원대상이 선정돼서 4월에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펼쳐 놓고 할 수 있는 게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AI 전체 삭감하기는 그렇고 상당히 현재 구분되지 않고 올라왔던 2개 사업을 통폐합해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현실성 있게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AI 사업이 아니면 이 정도 기획서라면 전원 다 안 해야지 타당하지만 AI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현재 문제 있는, 준비가 안 된 두 가지 사업을 통폐합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가능성이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1번하고 3번은 구체적인 대안이 안 보인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보류사업으로 넘겨서 국토부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더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은 김종양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양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1번하고 3번은 보류사업으로 넘기고요. 2번은……

○이종욱 위원 2번은 저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자료를 보고……

○소위원장 전용기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보류하시지요. 150억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3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사이버 보안 구축지원 사업에 4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과 또 다른 내역사업인 혁신기술발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7번 AI 시티 조성확산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선행 사업을 점검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중복성을 해소한 이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4번 아람근린공원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국토도시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9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국고는 35억 원 정도 일부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억 원은 SPC가 분담하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응답형버스(DRT)를 4억 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규제샌드박스 공모했을 때 사업별로 5억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것을 다 공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켜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시티 조성확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과는 이게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AI 특화시범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내에서 특정한 구간을 선정해서 거기다 리빙 랩을 구성한 다음에 기업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시티와는,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그것과는 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람근린공원 보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지자체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별도의 근거도 없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중에서 사이버 보안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안 사고와 관련된 경각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사항입니다. 보안 사고와 사이버 위협 증가로 인해서 스마트시티 구축과 동시에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이버 보안에 배정된 재정지원금이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담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 담을 계속 올라가고 해서 기존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을 원점에서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않아요, 오프라인 세상은. 그런데 온라인 세상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이 안 되고 일부 세팅이 되고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것을 다음에 보안체계 구축을 하면 앞엿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하면서 그때 7·7 디도스 사건 터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그다음 해에는 전 부처에서 이런 예산을 막 전향적으로 검토해 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 사업을 전 부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사이버 보안 사고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부처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액한다라고 해서 그게 안전하고 다음 해에 가고 이번에 투입된 돈이 쓸모 있게 사용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액 요청한 안이 되어야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태영 위원** 김희정 위원님 마이크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고장을 내는 거야, 왜 그렇게 고장이 나는 거야?

○**김희정 위원** 야탕 탄압.

○**염태영 위원** 그런 거지요?

(웃음소리)

○**김희정 위원** 행정실에서 상당히……

○**소위원장 전용기** 물어보니까 민감도가 그래서 그렇다는데요. 민감도 조정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살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잘 들으라고 크게 얘기하는데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제가 말씀, 보충설명 드려도……

○**소위원장 전용기**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49억 원 중에 14억 원 정도는 사업합의서에 따라서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이렇게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49억 중에 35억 증액인데 이 정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희정 위원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전용기** 이 정도면 동의해 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일단 제가 그 증액에는 하는데 왜 14억을 민간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사업합의서에는 돼 있는데 그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큰 틀에서 제가 동의하고요, 세부적인 사항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AI시티 조성확산 사업인데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AX-Sprint 300 프로젝트에는 빠져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왜 빠져 있지요? 이것도 AI인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니까 AI인데 AX-Sprint 같은 경우는 기존에 R&D로 돼 있는 것을 실용화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8개, 7개 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바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 1년 차, 2년 차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사업도 오래 걸리고, 특화 시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종욱 위원** AI 스마트시티에도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거고. 그러면 위에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하고도 분리해 봤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왜 그렇지요?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IoT 접목을 할 건가 이런 개념이고요. 특화도시 같은 거는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 놔서 그 구역에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실증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글썄요, 상당히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시티의 내용이 뭘데요,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AI를 접목해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이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다면서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실장……

○이종욱 위원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AI시티가 스마트시티와 일단 개념 자체는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의 2.0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사업하는 내용이, 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U시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스마트시티화 사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정부 와서 AI시티화하겠다는 건데요. 사업 내용으로 과거에도 U시티 사업이 별개 있었고 스마트시티 사업 되면서 별개로 해서 세부사업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AI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그러니까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둔다면 AI시티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 단계라고 지금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업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에 스마트시티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세종도 하고 부산에도 시범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체계와는 완전히 좀 다르게 갈 겁니다. 다르게 해서 실제 스마트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규모의 AI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걸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을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위원 설명 들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크게,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내용이 AI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많은 내용이 그랬는데 지금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다 하겠다고도 해석도 되고, 뭘 하겠다는 게 귀에 잘 안 잡히는데. 사실은 용역 해 보고 중점 지원 분야라든지 방향이 정립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빨리 하는 느낌이 있어요. AI 붐 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실장님, 사실 U, 스마트 그다음에 AI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는 최첨단화된 방식의 시티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최첨단화된 기술을 동원하면 이름은 스마트지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거의 AI시티화해야 되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덜 발전된 기술을 동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AI를 갖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이름은 스마트일지 몰라도 어차피 스마트 예산으로 했으니까 AI화 시켜 가지고 AI시티 화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거의 이름을 갖다가 달리한 중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종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AI 관련 용역이 내년 6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기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스마트,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스마트시티, AI시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중적인 중복성적인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거의 동일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리……

○소위원장 전용기 이연희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답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연희 위원 저희들이 AI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시티의 진화한 버전이 AI시티라고 보고 있고 지금 AI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속도 경쟁에서 정부 예산 투자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좀 뒤쳐져 있는데 이게 ICT 부분은 스마트시티에서 구축하는 신호등 체계랄지 ICT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AI 자율주행으로 더 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AI시티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은 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좀 대범하게 수용해서 이런 투자, AI에 관련한 투자가 진행돼서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스마트시티는 기존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거를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해서 어떻게 IoT 기법을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스마트하게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런 거였다면, 두 번째 AI시티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 중에 어떤 특정 지역을 구역을 좀 넣어서 거기서 기업들이 와서 AI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기존에 AI시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로드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받쳐서 바로 기본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드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후년으로 가면 이미 AI는 속도 경쟁인데 좀 늦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AI 경쟁에서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손을 듭)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이종욱 위원님이나 김종양 위원님이나 다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신 것 같고 차관님이 답변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8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로 신도시 조성하는 거랑 소규모 리빙랩으로 테스트베드에서 기술 수준을 조금 더 속도를 확

보를 하는 거량은 분명히 양립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그만큼 부산에 있는 스마트시티도 AI 기술 접목이 더 빨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좀 넓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속도를 더 가하자라는 측면에서 대범하게 동의를 해 주시면 결코 낭비나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도는 나가시고요. AI 관련이 뒤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웬만하면 의견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드려야 될 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스마트도시로 지정돼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세종하고 부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AI는 속도 경쟁이라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AI에서,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추진하다가 AI로 급속도로 추진되는데 우리가 예산도 확보 안 되는 상태라면 너무나도 속도 면에서 뒤처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AI 관련된 예산들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스마트시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무인 택시 돌고 있고 그리고 지난 달이었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속도로 하나 통제하고 실제로 무인 자동차 고속도로 실험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속도 경쟁에서 우리가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해당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7번도 보류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같이요」 하는 위원 있음)

6번·7번을 보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8쪽의 아람근린공원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 사업은 수용 곤란 의견이십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걸 정부 측 입장을 수용을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안태준 위원** 신영대 위원의 입장도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해당 부분도 보류를 하고요. 신영대 위원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 보류하면 이거 속도가 안 나겠네요.

○**안태준 위원** 빨리 넘어가고 한꺼번에……

○**소위원장 전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다음은 9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연번 1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에

5억 원 증액 의견과 연번 2번,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95억 1700만 원 증액 의견과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 사업에 11억 7000만 원 증액 의견, 대전 동구 대청호 탐방로 조성사업에 1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대전 대덕구 범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공사 사업에 50억 원 증액 의견과……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대전 중구 목달동 남달미로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88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하단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남 미사한강공원 주차장 설치 사업에 9억 4500만 원 증액 의견, 은평구 불광 실버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증액 의견, 광주 동구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연번 2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에 3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연번 11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7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 산불피해 공동체 회복 거점센터 건립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체 회복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우선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시도 포괄 보조사업으로 자율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용 곤란으로, 밑에 거와 마찬가지로 자율 계정의 의견을 냈던 것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하나의,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자율 계정으로 편성된 것을 어디다가 편성을 할지 구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밑의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들의 집행이 좀 원활한 데 중심으로 별도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저희가 수용 곤란의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증액이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예산을 신규로 증액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전 동구 대청호 같은 경우는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당초에 수용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 사업 이런 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전 대덕구 범동소류지 이것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하남 미사한강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용토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2개 사업, 은평구와 광주 동구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내역사업인 군북 중암지구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했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시도입니다.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이런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시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번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피해 공동체 회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덕군과 청송군 같은 경우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미만으로 해서. 그런데 안동·의성·영양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탈락한 사업을 증액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1년도에 생활기반사업으로 이미 국비 20억이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23년도에 국토부의 요청으로 공모사업 분야로 환경문화 사업으로 바뀌어서 진행을 해서 공모가 요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된 부분이면, 이미 진행된 사업을 공모 변경으로 국토부에서 제시를 해서 가지고 받아들였다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특수성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저희도 여러 가지 섞여 가지고 헷갈리는데요.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사실상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공모사업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몇 번 몇 번 몇 번인지 정확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것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견 말씀 주시고 방금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

10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미선정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안태준 위원** 아예 위부터 순서대로 쪽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럴까요? 그러면 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이었는데 이것은 증액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팔현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 의견이었는데 이것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 미선정 사업으로 대전 동구 대청호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반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전 대덕구 부분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남 미사한강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이었는데 이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윗부분에 대전 중구 목달동 도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88억 원 증액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수용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24억 원 정도 반영을 하면 어떨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평구 불광동과 광주 동구 선교저수지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군북 중암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공모와는 관계없이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염태영 위원** 이를테면 지역지원사업 중에 2026년 총액 1352억, 이 안에는 각 사업별로 단위가 다 쪼개져서 픽스됐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있는 것을 총합해서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활기반사업이 있고 환경문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각각의 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친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면 신청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신청된 금액은 국토부에서 또다시 심의하면서 또 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조정되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제출한 거고요.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총액이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것을 또 심의하다 보면 줄고 늘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태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에서 심의된 것이 떨어진 것을

국토부로 들어왔을 때는 국토부가 그냥 받으면 쉽지 않다고 하는, 절차나 이전의 사례가 쉽지 않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총액이 정해져 있을 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들어온 것들은 한번 그 총액의 규모 내에서 융통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업 신청은 우리 국토위원들이 적어도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들을 넣지 무조건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총액 내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제안된 것들은 그 안에서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위원님, 그러한 면까지 사실……

지금 대부분 사업이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하면 나중에 불용하거나 그런 식이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 간 조정, 내시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이 되면 다른 사업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광역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광역 단위로 전체 취합해서 들어온 예산이 잡힌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총액 범위 내에서는 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또 국토부도 판단할 수 있는 묶도 묶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국토위원들께서 이렇게 제안된 것들은 그 안에서 좀 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후 운영에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제 질문에는 답변 안 하셨어요. 아까 광주 동구 부분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조금 전에 차관께서 정리를 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매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요청이 많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생활기반사업이 있고 환경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생활기반사업은 각 시도에서 이미 건의를 받아서 순서를 정하고요 그것을 국토부에 올리면 저희는 거기서 부적합한 것만 잘라내고 삭제를 하고 순번에 따라서 그 실링 내에서 순위 안에 드는 것만 선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문화사업은 저희 국토부가 공모를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사업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 간에 저희가 더 많이 선정을 변동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차관께서 이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데가 있어서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어떤 순서를 세운 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은 선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앙부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해 주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포함을 시켜 주시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광주 동구 얘기를 했던 거는 생활기반사업으로 21년도에 20억 원이 책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국토부가 환경문화사업으로 공모해 보라 그래서 공모했다가 탈락이 되고 이후에 그러면 증액도, 공모사업에 한 번 탈락했으니까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이미 국비 책정돼서 생활기반사업으로 진행 잘 되던 것을 틀어서 사업이 이제 무산돼 버리는 게 광주 지자체에 귀책 사유가 있나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사업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동구 주민들이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거였는데?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차관님, 아까 설명 중에 9페이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설명하시면서 국비 이월사업이 있어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희정 위원** 그 말은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배정된 것 중에 돈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은 광천읍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기간 내 잔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나 증액보다는 더 큰 뚜껑 안에서 당겨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하시겠습니까?

○**윤종오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만 가능한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은 유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조금 전에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타 사업에서 혹시 불용이나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 그 사업의 불용 금액을 이 사업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비슷한 사업이 지역에 사실 많은데, 이번에 여기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던 말이에요, 서면질문을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면질문을 해 놓은 사업에 한해서 그런 조정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서면이든 구두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제기가 있었을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오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바로바로 막 서면으로 올리기가 좀 곤란해서 안 올렸던 것뿐이지.

그런 길이 열려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올릴 사업이 한두 개겠어요? 어느 선까지 지금 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에 상당히 혼란을 겪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자율계정이라는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편성하겠다 하나의 큰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틀을 깨지 않는다 하면 이 지자체에서 더 욕심을 낸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좀 부진한 사업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다 보면 그 틀은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또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욱 위원** 김도읍 위원 들어오시는데, 1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김도읍 위원이 제기한 38억 그것도 공모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윤종오 위원** 예, 맞아요. 공모사업이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정리를 하면요 안태준 위원님이 해 주신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님이 오시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은 김희정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희정 위원** 예, 그 사업은 잘 지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다른 부분들은 수용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대전 동구 대청호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렵다, 공모사업이다라는 말씀 양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세 가지는 수용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리고 대전 중구 목달동 남달미로 도로확장공사도 일부 수용인데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과 광주 동구 선교저수지, 수용 곤란 입장을 국토부에서 밝혀 주셨는데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아니, 답변 안 주신 것 같은데, 광주 동구……

○소위원장 전용기 답변을 안 주셨다고요?

광주 동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소위원장 전용기 보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전용기 수용하신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광주 동구 선교저수지는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전체 실링 내에서 나중에 살펴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해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도시재생사업,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수용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맹성규 위원님의 시도사업이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양해가 돼서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수용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래서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490억씩 두 개를 지원하거든요. 나머지는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수용하기 어려운 것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오시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다 양해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주택토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연번 1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와 관련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2억 8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주거급여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전월세 임차료 지원을 위해 17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과 관련하여 경매 차익, 배당, 임대인에게 변제받은 금액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과 회복금액의 차액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번 8번 스마트 생활 소음 실증평가 및 층간소음 체험센터 구축을 위하여 인프라구축사업비 2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예산안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앞으로 구간통계 조사 부분을 폐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하면 앞으로 주택가격동향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정부안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1쪽의 주거급여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전월세 임차료 부분인데요. 여기는 전액 현금으로 해서 보조율 50%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월세 가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 48억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역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부분도 저희가 원안 유지와 11억 부분이 있는데 11억 부분을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부분입니다.

23쪽입니다.

이것은 경매 차익, 배당 이런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에게 최소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타당한 효과가 있고 상당히 형평성 제고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태영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좀 있고요. 앞으로 물론 예결위 가서 또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재정 당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스마트 생활 소음 부분인데요. 이건 충북 제천에 인프라구축사업비를 해 달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다른 사업마냥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 넣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추이라든지 운영 체계 이런 시설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8페이지, 용인 아람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주셨는데 신영대 의원실 양해가 돼서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태준 위원님 오셨는데요. 나중에 또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정부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염태영 위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지금 경매 차익으로 배당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으로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00% 피해 회복이 된 사람이 28% 그리고 90%가 17.4% 다 이런데 30%도 안 된, 3분의 1도 안 된 사람이 3.1%입니다.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우려됐듯이 복불복처럼 어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회복이 100% 되고 어떤 사람은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30%도 안 되는 사람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 큰 피해 회복률에 차이를 보이면 30%도 안 되는 사람들, 50%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 또 인생에 대한 절망과 주택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려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올 11월이면 지난해 법 개정된 지 1년 후로 실제로 그동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개정의 내용들이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이번 11월에 법안 심사를 통해서 정기국회까지는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어서 최소지원금의 내용들이 법안에 담기게 되면 이것을 그때 예산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조건부 수용으로라도 해서 법안 통과 시에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것을 수용 곤란 하지 말고 조건부 수용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 회복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80%, 80% 가까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전혀 피해 회복을 못 받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그 형평 차원에서 최소 기준을 정해서 가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당장 법적 근거 미비를 떠나서 그러면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임대보증금의 3분의 1 방식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염태영 위원** 그것이 결국은 법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니까 법안에 담기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이 정도 규모 내에서는 조건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러면 여기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 기준이 아니라……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형태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조건부, 아까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수시배정 이런 것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면요. 예산을 세우는데 조건을 달아 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 입법 미비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예산을 묶어 두지 말고 방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끔 부대의견으로 의견을 남겨 놓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염태영 위원** 실제적으로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몇 %가 된다는 것 자체가 피해 회복률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될지를 몰라서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 예산의 융통성과 수용성을 갖고 있다면 그 표현은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 취지에 맞게끔 이해해 주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래서 예산을 묶어 놓고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전후가 바뀐 것 같아서요.

○**윤종오 위원** 아니, 법안 통과하고 나서 추경에 하지요.

○**손명수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손명수 위원** 이거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것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는 통과시키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이게 법적 미비라든가 이런 게 되면 사실 다시 심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그 취지만 수용하시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심사할 거니까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시니까 수용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류하는 방식으로 하시지요.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 예산이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세우고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렇게 국토위 차원에서 넣고요 부대의견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으면서 수시배정으로 한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소위원장 전용기**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합적으로 보류해 놓고 이후에 염태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염태영 위원** 보류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걸 넣고 그 대신 부대의견으로 그거 달고 수시배정으로 한다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관계 없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종욱 위원 저는 예산, 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최소지원금 제도를 할지 안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났다면 예산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담는 거는 부적합한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 하라고 예비비 있는 것 아닙니까, 연도 중에 법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수시배정이라든지 조건부로 하는 그런 전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재정 당국하고 상의를 하시고 우리가 국토위에서 법안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관례를 만드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보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논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저도 이 전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류해서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심사하시고 대신에 방법을 찾아서 알려 주시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다시 한번 그러면 그거는……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 법안을 내셨는데 저 같은 경우 50% 법안을 냈거든요. 나중에 통합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세사기당하신 분들의 일정 정도 피해 회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법안 통과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에 추경에 꼭 편성한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는 의견을 듣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염태영 위원 추경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

○윤종오 위원 이거 법안이 안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 가져가면 그냥 삭감이거든요.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법안과 예산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하는 취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하시고요 끝나기 전까지 국토부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오셔서 가지고 여기서 바로 논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의견 내세요.

○손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20페이지 정준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준호 위원 정부 입장 들었는데 보류해 주시면 저희도 고민해 가서 정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보류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윤종오 위원님, 일부 수용 입장 어떻습니까?

○윤종오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수용하는 걸로? 예.

그리고 이진태 위원님, 안태준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요. 11억……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큰 걸로 받겠다는 얘기니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수용?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은 보류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생활 소음 실증평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정부 측에서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 사실 엄태영 위원께서 이게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소위에 못 들어와 가지고 제가 대신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역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배려할 그럴……

○소위원장 전용기 마이크를 좀 대 주십시오, 위원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각을 세워서 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의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도 LH라든지 그다음에 건기연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국고 지원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김종양 위원 이게 이 지역에서, 제천에서 연구된 게 전국적으로 다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층간소음에 대한 체험센터를 갖다가 구축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지역에 한정해서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체험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공유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LH나 건설기술연구원에도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체험센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할 때 재원 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 운영한 그동안의 추이라든가 운영 체계를 봤을 때는 특정 지역의, 특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설이라든가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역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LH·건기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해서 다른 대안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일단 이거는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더……

○소위원장 전용기 보류? 보류하시겠습니까?

○김종양 위원 예, 제기한 위원하고 다시 논의 한번 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와 관련해서는 보류 요청이 있어서 보류하는 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윤종오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거급여지원은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과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스마트 생활 소음 실증평가도 보류사업으로 남기겠습니다. 입장 확인한다고 해서 가지고요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다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연번 1번,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입니다.

연번 1번,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와 관련하여 신축 매입임대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3년 분할 집행 방식을 유지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 예산 1조 9622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호수를 6만 6500호에서 7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8292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 유형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452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 미분양 매입규모를 5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하기 위하여 24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연번 2번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용자사업에 대하여 제시된 동일한 이유로 출자 예산 1조 7418억 56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과 7329억 6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4059억 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및 정부지정 매입단가 20% 상향을 위해 3078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아울러서 지방 미분양 매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47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통합공공임대 용자와 관련하여 통합공공임대 7만 호 신규 공급 예산 1조 9500억 원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1조 126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370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연번 4번, 국민임대 출자, 행복주택 출자, 통합공공임대 출자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34% 상향하기 위해 2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5번, 통합공공임대 출자와 관련해서는 통합공공임대 7만 호 신규 공급 예산 2조 2700억 원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7907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인 1657억 원 중 장기전세주택 가구 비율인 79%에 해당하는 130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593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28페이지, 연번 6번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따른

보증금 지급 증가로 인한 정산보험료 부족분 및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예치 보험료 증가분 증액을 위해서 543억 45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462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 내역사업인 단일 세대 및 세대통합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현을 위해 371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실 소관 주택도시기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5쪽 다가구매입임대 용자 부분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게 현행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금 배치되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을 더 증가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단가 부분을 손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 위원님께서 유형별 지원단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683억 원 정도, 682억 6000만 원 증액하는 쪽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쪽으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인데요. 이 논리는 아까 용자 부분하고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매입단가 20% 상향을 위한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8억 9700만 원 증액의 반영을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전국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매입규모 부분인데요. 원래는 수용 곤란했는데 이 부분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용자 부분입니다.

이거는 1조 이상 저희들한테 증액을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1109억 8200만 원 증액을 희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통합공공임대 착공 물량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께서 지원단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41억 700만 원 정도 증액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금 여건이라든지 지난 10년간의 공사비 추세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는 8.5% 인상 정도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평균 지가 대비 서울특별시 택지비를 고려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별 형평성이라든지 주택도시기금 재무 여건을 고려해서…… 서울시만 이렇게 별도로 고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공공임대 7만 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공공임대 착공 물량을 고려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1055억 6800만 원 증액 반영을 저희가 회

망을 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 가구 비율에 해당하는 증액 1309억 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향후 분양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께서 지원단가 인상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해서 66억 2300만 원 증액은, 8.5% 정도 인상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기 위원님과 문진석·이연희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전용기 위원님 의견을 받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입니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각 인상단가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307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용기 위원님께서 인건비 10% 인상, 그다음에 송기현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사 1인 충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인건비까지 고려해서 91억 2700만 원 수정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가 이것을 빠트리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전액 교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안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가구매입임대 관련해서는 물량 증가보다 단가 현실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매입 규모는 5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에, 뒤에 얘기할 때 달리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다가구매입임대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 인상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방 미분양 매입 규모는 금년도 3000호, 내년도 5000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5000호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일단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지방 미분양 매입 규모는 5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하

고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구안은 수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관련 예산의 특징이 크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분량은 많이 줄이고 임대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다가구매입임대 쪽인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3조짜리가 9조가 됐는데 내역을 봤더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업 지급 방식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그냥 1차 연도에 100% 다 지급하는 방식이었지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게 부진하니까 3개년으로 나뉘어요, 34%·33%·33% 이렇게. 그러다가 내년에는 또 편성하면서 2개년으로 40%·60%로 나뉘어서 지급하겠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작년분 안 줬던 것까지 다 들어가고 원래 했던 것의 반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되는 건지를 확인을 했는데 국토부가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약정을 하고 착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착공을 해도 최소 2년 이상 걸리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를 수 있는데……

통계를 받아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24년 경우에도 원래 계획은 5만 호를 계획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약정은 3만 8000호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8000호도 1년 10개월 지난 금년 10월 기준으로 1만 2000호밖에 착공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착공하고 난 다음에도 또 최소 이삼 년 걸리는데 결국 한 사오 년 걸리는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는 2년 만에 다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물론 LH에서 출자를 해 놓으면 그 돈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LH가 쌓아 놓고 이자 놀이 할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지금 급한 데 많잖아요, SOC라든지. 주택이나 부동산 쪽에도 급한 일 많지요. 굳이 필요도 없는 돈을 이렇게 LH 쪽에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문제 제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24년에는 일시불로 일시에 다 지급하고 금년 25년도에는 3개년으로 나누어서 착공을 당기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3개년 나누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신축 매입임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호 미만이 있고 또 100호까지 되는 좀 큰 사업들도 있고 한데 50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대체로 지방공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호 미만 사업들은 매입 약정에서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한 2년 내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 결국은 3개년에서 받아야 될 재원을 자체,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급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특히 단기 공급이 부족한, 단기 공급대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신축 매입임대나 매입 약정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3개년으로 나누었다가 내년에는 또 2개년으로 해서 소규모로 공급하는 주택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소규모 50호짜리는 할 수 있겠지요. 거의 다 준비돼 있고 토지 보상도 다 끝나 있고 착공해 봤자, 빨리하면 1년 반 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이종욱 위원** 실장님, 그런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평균적으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런 비율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한 삼십……

○**이종욱 위원** 작년 것 5만 호 중에 1만 2000호만 이제 착공했고 앞으로 공사기간 이삼 년이 걸리고, 금년도 것 약정분 3만 호 중에 착공한 게 2000호밖에 안 돼요. 이것 앞으로 공사 이삼 년 해야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그리고 보니까 작년분하고 금년분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시는데, 그것을 보자고요. 제가 돈을 깎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주택 공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2개년에 걸쳐서 7만 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축 매입임대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돈은 주겠다니까요.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은 주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에서 현 상황이나 통계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작년 3만 8000호 약정 체결 이후에 금년도 1만 2000호밖에 아직 착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서 공급한 게 과거에는 사실 물량이 많지가 않았습시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공급 부족 문제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축 매입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2년간 11만 호도 하겠다고 그때 발표하면서 작년에 거의 4만 호 이상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하고 공급을 했는데 다만 그게 대책 발표 이후에 거의 하반기 11월·12월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 시점이 거의 11월·12월이기 때문에 사실 착공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 아직까지 착공된 게 많지는 않다. 그래도 그렇지만 일단 착공을 다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착공이 다 될 테고요. 금년도에 약정 체결하는 부분은 벌써 3만 5000호 이상 약정이 체결됐습시다. 그 부분도 연이어서 계속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향후에 또 신축 매입 약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 통계만 볼게요. 금년도 원래 하려

고 했던 게 5만 호였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약정한 게 3만 호지요. 그런데 예산은 5만 호로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3만……

○이종욱 위원 그런데 5만 호 중에 착공한 게 2000호예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4만 8000호는 착공도 안 했다고요, 금년도 것. 그것 앞으로 착공하면 빨리해야 되는데 공사를 빨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4만 8000호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것을 뭐 2년에 나눠서 줘니까? 앞으로 착공한 2000호도 2년 안에 공사가 안 되고 아직 착공 안 한 4만 8000호가 있는데 그것은 2년에 나눠서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것을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제 지적은 그거고요. 작년 것, 금년도 것 진행 상황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주택토지실장님, 그 답변이 안 되나요? 이종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착공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 작년 24년도에 LH 약정 체결 물량 3만 8000호 중에, 3만 8000호가 저희들이 8·8 대책 발표 이후에 약정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게 이제 11월·12월에 거의 다 몰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 체결 이후에 착공까지 인허가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많은 물량이 착공이 안 됐지만 지금 준비 상황을 봤을 때는 조만간 다 착공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약정 매입을 해서, 약정을 통해서 이제 신축 매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2년 이상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50호 이상 소규모, 2년 내에 준공까지 되는 사업들도 한 삼사십 %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2년 정도에 나누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주택공급 정책, 그러니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그래서 24년도에도 신축 매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려고 전 정부에서도 쪽 꾸준히 노력해 온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관련한 예산이 있어야 신축 매입을 계속 꾸준히 하게 진행을 할 텐데 이 삭감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주택공급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고……

○이종욱 위원 아니, 이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기 힘든 게 이게 선불이 아니지요? 기성예 따라서 나가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기성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착공도 안 된 돈을 어떻게 줘니까? 착공되면서 1차·2차·3차·4차·5차까지 기성 해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준다고, 제가 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불을 미리 줘니까? 정부 공사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축 매입 임대인데, 소유권도 안 넘어온 상태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는 돈을 이렇게 부풀려서 예산에

계상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예산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매입 방식이다 보니까 토지 구매대금이 선금으로 지급이 돼야지만 사업이 진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선금 같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이후에 바로 한 60%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제때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하고 김규철 실장님, 주택토지 정책 분야는 내가 질문하기에도 민망하고 참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는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륜과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주택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부실한 정책을 과연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주도를 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릴고.

실장님!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도읍 위원 주택도시기금 용자, 출자가 예산이 쪽 들어 있어요. 다가구매입임대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 이러한 예산들이 이재명 정권의 주택공급 정책에 카운트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가구매입임대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대상지가 어느 지역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대상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수도권은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도권 어디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서울에도 있고.

○김도읍 위원 서울에 몇 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정확히……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다가구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착공 물량이 한 1만 호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1만 호 정도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김도읍 위원 이게 집행 가능성이 있나요? 이종욱 위원께서도 질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집행 가능성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LH만 1만 호 그 정도 되고 SH까지 포함하면 한 1만 500호 이상으로, 1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김도읍 위원 신축 매입이든 구축 매입이든 이 매입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실질적인 주택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가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도 장담을 못 하잖아

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신축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거의 경쟁률이 100 대 1 이상이 되는 자리들입니다. 서울에 대개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용자와 출자 다 합쳐서 서울에 지금 총 몇 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내년애, 아까 말씀……

○김도읍 위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호수가 몇 채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신축 매입으로는 최소한 1만 호 정도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1만 호?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착공만 1만 호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더라도 수요가 과연 될지 그거는 잘 면밀히 따져 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채도 신축 매입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실질적으로 주거 약자들에 대한 공급 효과가 확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방 미분양 매입 규모에 대해서 차관님 아까 수용 곤란이었다가 수용하시겠다고 의견을 바꾸었는데요. 그러면 용자 부분을 바꾼 거예요, 출자 부분을 바꾼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두 개 다……

○김도읍 위원 둘 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도읍 위원 내가 듣기로는 26페이지 수용으로 바꾼 것 같은데 용자, 출자 다 바꾼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출자, 용자 다.

○김도읍 위원 다 바꾼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그러면 지방 미분양 이거는 대상 지역이 대구, 부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지방, 비수도권의 전역이 되겠고요. 지방의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미분양 난 업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방 미분양 문제 잘 해소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거라도 좀 해결해야 이재명 정권의 주택정책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십시오.

정책관님!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김도읍 위원 정책관님한테 바로 질의를 할게요.

29쪽에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단일세대는 뭐고 세대통합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단일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내부에 있는 싱크대라든지 에어컨 같은 걸 설치하는 것, 그걸 바꾸는 것이고요. 세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주로 만들었던 공공임대 주택들이 10평짜리라든지 굉장히 작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벽을 터 가지고 하나로 체대로 공급하는 것을 세대통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세대통합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이 예산에?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대상지라기보다는 그거는 단지 하나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을 바꾸다 보니까 거의 전국의 모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그거는 LH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간이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세대통합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지었잖아요. 그게 다 10평 내외거든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에서도 인구소멸지역 내지는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채를 한 채로 만들어 주면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거기의 학교도 폐교 위기도 모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대통합 이 부분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단일세대 리모델링 이 부분이요, 정책관님은……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게요.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1단지 임대아파트 가서 리모델링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건축을 하면서 내부에 석면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일단 LH가 리모델링한답시고 하는데 석면을 걷어 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정이고 벽이고 석면으로 해 났는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하면서 자재를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실상 철거를 하고 골조를 남겨 놓고 리모델링해야 정상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관님?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집에 그냥 벽을 하나, 벽과 천장을 더 만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사는 어르신들이 리모델링하기 전에 혼자 쓰는 조그마한 침대 넣고 이렇게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이 침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아, 예.

○**김도읍 위원** 아, 예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내 지역에 가니까…… 과거에 내 지역이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한번 가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이게 전국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실제로 그게 아니면 거기서 정들고 거기서 살고 싶은데 좋게 해 주겠다고 리모델링을 한답시고 했는데 실질적인 평수가 줄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정책관님이 현장답사하시고 그 부분은 다시 돈이 들더라도 다 뜯어내고 골조만 남겨 놓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확인할 겁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금곡동 주공1단지 거기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만약에 가면 제가 같이 동행해 드려도 돼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실상이 그렇더라고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침대가 큼니까, 어디. 혼자 쓰는 조그마한 침대인데 그게 리모델링하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챙겨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일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24페이지, 송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율을 했는데요, 정부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걸로. 수용 곤란 입장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것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다가구 용자 관련해서 이종욱 위원님과 윤종오 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인데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윤종오 위원** 저는 일단은 연례적으로 하여튼 매입임대 실적이 계속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종욱 위원님 감액 의견 내셨는데, 조금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순차적으로 주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 예산상 5만 호가 계획돼 있고 약정이 3만 호를 했는데 실제 착공은 2000호밖에 안 했어요. 착공한 2000호도 내년에 착공 공사비를 다 줄 필요가 없고, 2000호뿐만 아니고 그 예산상 있는 4만 8000호는 아직 약정도 안 됐는데 이거를 돈을 다 100% 내년에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세한 통계나 자료를 주십시오. 주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이연희 위원**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도 LH가 공급 물량 착공을 작

년에 5만 호 한다고 그랬나 그렇게 했는데 연말 12월 달에 4만 5000호를 밀어서 심지어는 12월 29일·30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3만 호가량을 임박해서 한 거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착공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월별로 균형 있게 좀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쉽게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임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착공을 지금 연말에 또 다 이거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산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월별로 균형 있게 신축 매입도, 착공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야지 이게 연말에 몰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도 발생하고 지적사항도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특히 공급 절벽에 따른 공급 확대가 앞으로 이삼 년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 신축 매입을 통해서 공급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의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 매입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수용을 해 주는 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 수용 곤란 입장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윤종오 위원님, 제가 한 것 그리고 권영진 위원님 하신 거는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출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출자도 이종욱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윤종오 위원님은 정부 입장 수용해 주셨고 저도 일부수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권영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으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위원님 일단……

○윤종오 위원 수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동의하는 걸로, 저도 일부수용 동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희정 위원님 오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보류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일부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이연희 위원님 동의해 주시나요?

○이연희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저도 동의하는 걸로 28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도 일부수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는 수용해 주셨던 걸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 25페이지 이종욱 위원님 안 그리고 26페이지 이종욱 위원님 안, 27페이지 김희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4번과 5번을 보류하고 다른 것은 정부 측과 입장이 조율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페이지입니다.

4번,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증액 또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모두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35페이지에 있는 연번 9번,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R&D 사업은 건설 전주기 사각지대가 없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관련 R&D를 통합 관리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뒤의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연번 10번부터 18번까지의 9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에 연번 9번 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433억 62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정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정부 측 의견 저희가 제시했고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39페이지,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23건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정 의견을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의견을 들어 보신 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적자 심화 상황과 관련하여 국고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윤종균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적자 심화 상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익 사업 발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이 이유는 공기업에 적자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자구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도시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이 부분 인데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AI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한다’로 수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서울시와의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런 재난과 관련된, 도시홍수 대응체계와 관련된 총괄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와 하나의 대응체계를 같이 구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관리비 및 전기·가스·수도요금 미납 가구수를 추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 이후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을 개정한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 다만 전기·가스·수도요금 미납 가구수와 밑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국토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관리비 미납 현황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법을 개정한다’ 이런 쪽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또 14번에서는 ‘공급호수 확대를 전제로 한 적극적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윤종오 위원님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 주거정책 측면에서 행복주택 확충을 적극 검토한다’, 황운하 위원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등 선호입지, 확장형 평면 등 청년층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특화주택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의 확충을 검토한다’ 이 부분으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번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한국부동산원의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규제지역에 추가된 10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종욱 위원님 방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규제지역에 추가된 10개 지역에 대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제지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번입니다.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서해안로 확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흥IC 진출입로 확장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 이진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흥IC 진출입로 부분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23번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보고 마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보고사항 중에 42페이지 15번과 관련해서요 별지로 나눠 드린 것처럼 수정을 했더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3번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도시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마련한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

을 느끼는 모양이지요?

좋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한다?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는 이러이러한 부처 등과 함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재난 총괄이 행정안전부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논의한다’ 정도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진행하면서……

○**김종양 위원** 논의한다, 논의한다…… 논의한다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2번 윤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공기업 적자 국고 지원보다 자구노력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의 수정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양 위원님께서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번 관련해서요.

그리고 41페이지, 박용갑 위원님께서……

○**김종양 위원** 3번은 ‘논의한다’ 대신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전용기** ‘적극 논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한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적극 노력한다’라고 하신 김종양 위원님의 말씀을 정부 측이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관리비나 공공요금 등은 소관 부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 윤종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문제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었는데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황운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차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이종욱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문구는 수용하고요. 실제 10개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며칠 사이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치유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결단을 내려 주는 게 국민들의 추가적인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수용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문안은 수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안은 수용하고요. 문안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논의는 끝났고요. 이제 보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식사하고 나면 본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윤종오 위원** 밥 먹고 하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식사하고 나면 본회가 있어 가지고요.

○**윤종오 위원** 나중에 2시 끝나고 합시다. 이것 다 할 수 있겠어요?

○**소위원장 전용기** 추가적으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하니깐요 정리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끝난 줄 알고……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려고요.

이 심사자료가 정부 의견이 조금 눈에 거슬리거든요. 특히 감액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국회 권한인데 행정부가 ‘수용 곤란이다’ 이런 용어가 부적합한 것 같고 ‘정부안 유지 희망’ 이런 식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액도 수용·불수용보다…… 증액은 글썽요, 증액은 용어가 동의·부동의지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리고 AI 관련해서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서 관련 자료 보충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예, 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자료를 일단 먼저 배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준호 위원님, 20페이지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해서 양해됐습니까?

○**정준호 위원** 정부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동의?

○**정준호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정준호 위원님 보류사업은 정부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정리가 됐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염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관련 규정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부대의견으로 가는 부분……

○소위원장 전용기 정확하게 오후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고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자료 배포가 다 됐습니까, AI 관련해서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예, AI하고 혁신펀드 두 가지를 아까 보류 안건으로 하셨습니다.

먼저 2호 안건 혁신펀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님께서 미투자 금액이 150억 원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00억 원 감액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한 35억 원 추가 투자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펀드운용비용이 사실은 총액의 10~20%를 자산운용사한테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제하면 실제로는 150억 원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58억 원이 남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58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이미 투자처가 협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잔액 부분과 관련해서도 3호펀드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투자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종욱 위원님,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종욱 위원 여기는 김도읍 위원님이 있네요. 정점식 위원도……

○정점식 위원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수용하신다고?

○정점식 위원 예.

○이종욱 위원 수용하시지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님.

AI는 김희정 위원님 오시면 하시지요, 오후에.

○소위원장 전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페이지 2번까지만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후 속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류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토론이 돼서 오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몇 시에 합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본회의 이후에, 본회의가 2시간가량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본회의 산회 이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 속개하겠으며 행정실을 통해 문자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는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에서 곧바로 국토위원회에 장관님의 정확한 일정을 알려 달라, 그러면 언제 국회 올 수 있냐 없냐, 그래도 좀 내역이라도 우리 상임위는 좀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토부 직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협력관은 전화받고 그냥 잠적해 버렸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라든지 뭔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서실은 아예 전화를 다 꺼 놓고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종류의 일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비서실과 협력관조차 모르고 있던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담당 협력관이나 비서실은 최선을 다해서 소통창구를 열어 놓고 ‘죄송합니다. 실무진이 다 알 수 없습니다’라든지 또는 곧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담당 협력관들이랑 비서실까지 의원실 무시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소위원장 전용기 아마 의장께서 양해해 주실 때는 충분히 국토부장관의 공식 일정이 확인됐으니까 했을 겁니다.

○김희정 위원 그게 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소위원장 전용기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정 위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소위이기는 했지만 법안을 했고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자기들 법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국회 다른 상임위원들이 보기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평소에 제대로 안 했으면…… 우리 상임위 전체 욕먹고 있어요, 지금.

○소위원장 전용기 그 문제는 아마 본 회의가 열리면, 상임위가 열리면 한 번 더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희정 위원 일단 답을 좀 들어 보세요, 직원들 그런 식으로 교육할 건지. 장관님 태도도 불순하지만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필요한 서류, ‘이거 원안 유지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묻는 거에는 대답도 안 하고 이게 뭐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하고 기조실장 다 계시니까 아까 직원이 전화 안 받고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일단 답을 해 보세요, 왜 그런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내용이었는지는 몰랐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김희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일정 뭘니까, 빠지신 일정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오늘 서울시장과 주택공급……

○김희정 위원 그거 오전에 이미 끝나고 보도자료 나왔는데 뭘 얘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같이 오찬하면서 그 부분을 했고요. 현장……

○김희정 위원 지금 이 시간까지 오찬하고 계셔서 못 나오신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 죄송한데 오늘 예산은 끝내고요 위원회가 열리면……

○김희정 위원 아니, 지금 답을 좀 들어 봐요. 왜 못 나오신 것, 무슨 일정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알기로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업계하고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소는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장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까 우원식 의장이 하는 말이 노조간담회도 얼핏 이야기하던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노조와의 그것도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느 노조인데요?

○김희정 위원 비공개 일정입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이 장관 일정을 다 모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만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오늘 국토소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관 일정은 개략적으로밖에는 모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보고는 받으셔야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지금 차관이 하루 종일 여기에 계십니다.

○김희정 위원 차관님이 뭐 때문에 본인이 대참하게 되었는데를 알아야지요. 본인이 장관을 대신해서 대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장관이 가야 될 일정인지 차관이 가야 될 일정인지 같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윤종오 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진행발언.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셔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김희정 위원님이 화가 나서서 따지는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예결위 자리고, 이미 본회의장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가 파행이 돼서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 와서 지금 다시 따진다고 해서……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회의를 파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윤종오 위원 이미 본회의장에서 파투 난 부분을 지금 여기 예결소위 심사하는 데에서 이걸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김희정 위원 아니, 명확하게 그냥 1분 내외로 답변하세요. 몇 시에 무슨 일정, 어디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종오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제가 발언권 받고 진행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부분 빨리 정리하시고 오늘 회의가 빨리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하시지요.

직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내용 때문에 장관이 참석 못 하셨는지는 예결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따로 김희정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지금 김희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왜 예결소위에서 이런 이야기 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희정 위원님도 짚고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상임위 문제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성심성의껏 통과시킨 법안을 장관이 와서 심의 절차에 참여를 해 줘야지…… 그런데 아까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하는데, 뭐 노조와의 간담회 어찌고 저찌고 이러더라고. 그것은 본회의 불참 사유가 안 돼, 사실은.

○손명수 위원 따지더라도 전체 다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이것은 예결소위잖아요.

○김도읍 위원 정말 대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본회의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조금 순연시키고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차관은 해 봐서 잘 알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예산 심의가 우선이니까 먼저 하시고, 앞으로 장관이 출석하는 상임위가 열리면 다시 한번 따져 봐도 됩니다. 그리고 회의 이후에는 따로 조치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께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김희정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전체가 보고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예, 먼저 말씀을 주시고 상임위 전체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류사업은 총 10건으로, 보류사업만 발체를 해서 별지로 정리한 가로로 된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보류사업은 2건입니다.

연번 1번,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공용차량의 관리 부적정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의 감액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2페이지, 연번 2번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AI 관련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준비 부족 등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 2건의 보류사업은 연번 1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과 연번 2번의 AI시티 조성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택토지실의 보류사업은 총 6건입니다.

연번 1번,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 및 부대의견 첨부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연번 2번, 스마트 생활소음 실증평가 및 층간소음체험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LH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유사한 실증평가를 수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번 1번 및 2번의 다가구매입임대 용자 및 출자와 관련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사업의 실적 저조 및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살펴본 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번 3번과 4번은 공공임대 출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한정하여 건설 지원단가 상향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용차량의 관리 부적정 및 권익위 권고 미반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관 전용 차량과 일반업무 차량 3대를 이렇게 추가 배차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운전원 출장기록으로 차량을 관리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의 관리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부대의견에 이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10개 부처 합동사업으로, 일 이 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그루핑(grouping)을 해 봤습니다. 우선 사업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결과 지원 규모의 15배 이상 수요풀이 확인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11월 중에 3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준비와 관련해서는 사업 관리지침 초안을 기 마련하였고,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연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통합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타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걸로 기재부에 확인을 받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좀 유지시켜 주시길 건 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스마트시티와 AI시티의 중복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서 스마트시티와 AI 시티의 서로 간의 차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시티는 별도로 3개 도시를 앞으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전체의 구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존 도시의 일부, 신도시의 일부를 AI시티로 조성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범도시 추진 방향은 공공 주도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스마트시티는 민간

SPC 주도로 시행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실증하는 리빙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범부처 협업 체계를 통해서 각 분야 서비스 도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지적사항 중에 AI시티의 로드맵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 했는데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도시 관련 계획은 내년 초에 우선 도출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기본 구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시티와 연계해서 앞으로 저희가 성과가 되면 스마트시티에도 이 부분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몇 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부대의견을 기재토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충북 제천에 체험센터 인프라구축 사업비 20억 원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입지 등 제반사항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의원실과는 협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용자와 출자 부분입니다.

2024년 이후 LH 등에서 실제 집행된 내역을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대규모 단지 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다가구 등 건물 동 단위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업 단계별로 실제 자금 지급 규모 등을 LH 본사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내년부터는 준공까지 단계별 실집행 누적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3분할이 아니라 2분할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3분할로 지급하던 것을 약정 후에 2년 내 준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금 부담이 좀 가중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LH 50호 미만, 그다음에 지방공사 물량 중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고요. 진행 중인 사업장도 2년 내에 준공이 예상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준공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에 차질 발생이 예상돼서 2년 분할로 변경하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국 평균지가 대비 서울시의 택지비가 30배 높은 만큼 건설임대 지원단가를 좀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형평성과 주택도시기금 재무 여건을 감안할 때 차등 인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전보다는 15.3배부터 전남보다는 300배 정도 높은 만

큼 이것을 서울시 지원단가와 어느 정도 맞추다 보면 전라남도 같은 그런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차등을 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국토부 차원에서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매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 입주자 중 통합공공임대 소득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통합공공임대는 대체로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저소득층이 입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임대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목돈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이 입주하는 것으로서 20년 거주 후에는 분양전환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입주자 소득이라든지 자산 수준이 낮아서 지원이 필요한 주택 유형에 우선적으로 출자지원하고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출자지원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건의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갭이 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실제 집행내역을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국토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LH 담당자는 알 거예요. 그 담당자 엑셀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돈을 관리하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저희들도 어제 요청을 받아서 지금 확인했는데 일단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담당자별로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게 없다 그러면 중간에 돈이 몇천 억 날아가도 모르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담당자는 1원까지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제 질문은 이거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5만 호가 잡혀 있습니까, 3만 호 약정분이 잡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5만 7500……

○이종욱 위원 예산에 5만 호가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금년에 착공한 게 2000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4만 8000호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착공한 2000호…… 그 나머지 4만 8000호가 내년 1월에 착공한다 그러더라도 내년 안에 공사를 다 끝내 버린다는 얘기인데…… 돈을 남은 것 한 방에 다 주는 거잖아요, 25년 것은. 내년에 그렇게 반영돼 있지요? 그렇게 반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주위 답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지역 예산을 내년에 담는 것하고 후 내년에 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1년 만에 공사 다 한다고 4만 8000호를 1년 만에 약정하고 1년 치를 다 달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을 주셔야지요.

십분 양보해서, 백번 양보해서 2026년도분은 좋다 이거예요. 2년 치로 제도 변경해서 분할하시라고요. 그런데 2025년분은 3년 치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호밖에 착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만 8000호를 내년에 전부 약정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저도 주위 답을 수가 없잖아요, 발언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 생각은…… 글썄요, 2026년도분은 제도개선 하시고 2027년도분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든지 하셔야지 제가 합의가 되든지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 제가……

차관님, AI시티 조성확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안을 유지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스마트도시에 바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AI 특화 시범도시는 성공시켜야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에다 적용을 하시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을 스마트시티에다 넣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AI시티 특화 사업을 성공하면 스마트시티에 바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도읍 위원 부산·세종 스마트시티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철회를 할게요. 철회를 하고, 김종양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따로 한번 여쭙보시고.

○김종양 위원 아까 이야기했어요.

○김도읍 위원 김종양 위원님도 양해가 됐네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이게 보안관제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49억 증액 요구했는데 35억만 일부 수용을 했거든요. 14억 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서에 정부하고 SPC하고 서로 분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

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차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PC하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재정이 조금 더 투입이 되면 결국 그 수혜자는 시민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액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다만 이게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SPC하고 주무관청과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여기서 재정을 더 넣겠다라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게 연차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까지 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정이 조금 투입이 되면 더 큰 효과가, 더 큰 수혜를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실장님, 연차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 넣을 때는 이 점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아까 발언 신청하셨던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 건에 대해서 정부 설명까지 다 들었는데 대부분은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 것 같고, 이종욱 위원님이 지금 제기……

○**김희정 위원** 아니요, 저도 동의한 적 없습니다.

○**손명수 위원** 동의한 적 없어요?

○**김희정 위원** 예. 본부 기본경비, 장관이 이 난리를 치고 와서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무슨 차량 타고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도 못 하고 아무도 대답도 못 하면서 이것을 올려요? 보류하세요.

○**손명수 위원** 김희정 위원님, 장관도 하셨는데 기본경비 부분은 양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 사과할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손명수 위원**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주택도시실장님이 이종욱 위원님께 납득이 되게 빨리 소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종욱 위원님도 충분히 본인이 납득이 되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택공급이 중요하고 특히 매입임대 부분이 그중의 큰 한 축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상황이 주택공급이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임대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착공이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그게 소화가 되겠느냐, 이종욱 위원님 또 예산 전문가시라 이것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빨리 실무자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적극적

으로 이걸 소화하겠다, 그것을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어느 정도 김희정 위원님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안태준 위원 저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당 위원으로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통과 안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못 해 버리면 엄청 난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뭘 하겠다든지 어떠한 정책이 있다든지, 실제로 2000호밖에…… 지금 이종욱 위원님이 지적 계속해 주셨지만 실제 한 것 중에 몇천 호밖에 못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어떻게 해서 내년에 이만큼 예산을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야지. 저 진짜 여당 위원으로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이번에 주택정책을 야심 차게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거고 통과시켜야 되는 명분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 의견을 오늘 준 것도 아니고 진작 감액 의견을 줬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 꼭 빨리 설득을 시켜서 의지도 확실히 보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연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의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1번항 본부 기본경비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 일반 차량 3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데 이게 전임 박상우 장관 때도 이렇게 운행해 왔고 원희룡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운행해 온 것 아니에요? 김윤덕 장관 들어와서 특별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국토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와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차량일지 부실하게 관리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김희정 위원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대범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전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모양인데……

○김희정 위원 아니요, 다른 부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다른 부처가 아니고 국토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김윤덕 장관 들어와서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전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도 제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부 기본경비, 차량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렸고요.

다른 지역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르지만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서울 지역, 수도권에 별도 단가를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부분도 정부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데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문제 지적인 것에 대해서 차관님 보고 중에서도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요,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1월에 공모를 하고 3월에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수행을 3월부터 바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평가기준이나 지원단가나 산정방안이나 사업비 관리방안이나 이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한다? 저는 이런 예산을 정부에서 통과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전히 수요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감액을 철회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월에 사업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좀 더 상세한 계획을 보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김희정 위원 2번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6페이지 4번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잠깐 이석하셔서 가지고요 정리를 못 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출자.

○김희정 위원 저는 1번, 2번 사업에 대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4번은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임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 낸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낸 것도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생활소음 실증평가, 4페이지 2번, 권영진·김은혜·김종양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정부 측에서도 일부수용으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종오 위원 사실 이것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를 그냥 제천에 하는 거예요? 제천에 그냥 하는 걸로 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내용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 의원실하고도 협의는 했고요.

○윤종오 위원 제천에 하는 걸 고정했던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업을 한번 시범사업 어딘가 할 건데 한 2억 정도 용역비 올린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임태영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조정을 한 내용을 국토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가구매입 용자·출자 관련해서 이종욱 위원님, 양해되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무슨 양해가 돼요?

○김희정 위원 설명이 안 됐잖아요.

○정점식 위원 아니, 설명이 안 들어왔는데……

○소위원장 전용기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착공 물량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약정을 4만 호 정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신축 매입임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정을 나중에 하반기 때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24년 11월 달까지 1만 호 정도밖에 약정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거의 다 돼 가지고 4만 호가 갑자기 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승인과 착공도 역시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LH의 약정, LH 착공 물량인 2000호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2만 호를 착공하겠다, 3만 호를 착공하겠다 아직까지 이것을 책임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숫자를 못 밝힌다는 점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사들, 그러니까 SH나 IH나 GH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2300호 약정을 체결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인 경우가 많아서 8월 현재 이미 1900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 완전히 입주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3개년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예산 부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점을 특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방공사라든지 아니면 LH에서 한 20% 정도의 물량은 빌라라든지 아니면 다가구주택 같은 소규모 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 2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걸 3개년에 나눠 주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자금 경색 같은 우려가 있어서 주택공급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SH나 IH나 GH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회사채 발행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돈을 지원받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인천개발공사하고 SH공사에서 원래 단년도로 하던 걸 올해 3개년으로 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것을 단년도로 다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원래 1년 하다가 3년으로 나눠 주다가 그러면 내년부터 2년으로 나눠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종욱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9·7 대책에 들어 있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이종욱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 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수당 여당에서 지켜 줄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설명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24년 말에 많이 했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예.

○이종욱 위원 24년도 예산은 100% 다 가져갔잖아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24년도까지는 단년도 지급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단년도, 돈 다 가져갔는데 연말에 착공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끝났어요. 24년분은 정부 입장에서 LH 줄 돈은 다 줬고, 그렇지요? 안 하고 있는 거고. 25년도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사실 24년도분은 정부가 다시 돈을 받아야 돼요. 그것 받을 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저희가 항상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한두 푼입니까? 구조를 대충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이런 관행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년 것은 어차피 돈 다 줬으니까 돌려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자고요. 25년 것은 2년 치로 나눠서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25년 것은 3년 치로 나눴습니다.

○이종욱 위원 26년 것.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26년 치부터 2년 치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라니까. 시작 안 했으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해 보시라고요, 열심히 2년 안에.

그래서 저도 좀혀서 25년 것만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수습하려고. 25년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00호만 착공했다니까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지방공사까지 합치면 4000호입니다.

○이종욱 위원 LH가 대부분 물량이지요, 이 돈의?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한 80% 정도의 물량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80% 놔두고 20% 이야기하냐고요. 논점 흐리지 마시고. 지금 5만 호 예산에서 2000호만 착공했어요. 나머지 4만 8000호를 약정해서 준공까지 1년 안에 끝내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제 이야기고.

그것 부실 시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그건 아니고요.

○이종욱 위원 제가 2년이라고 그랬지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 2년 반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한 동 지어도 공사 2년 안에 하기 쉽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건설, 임대 아파트라는 것을 하면 토지 취득해 가지고 뭔가 단일화된……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자료라든지 제공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통치자, 나머지 지엽적인 얘기 가져와 가지고 1년 안에 끝내는 것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다 양보했잖아요. 24년분 양보했고 26년분 양보했고. 25년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숫자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한 푼도 못 깎겠다 그러면 저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여당에서 파행

하고 일방통행하시든지 아니면 숫자를 만들어 오라니까요.

그리고 언제 한번 저한테 이것 설명했어요? 의원실에 연락도 안 했잖아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 저 앞에 문 앞에 붙잡고 한 장 내밀면서…… 양해가 됩니까? 가져온 자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국토부, 9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대충 관리합니까? 이자가 얼마데요. 내년에 120조 적자국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6조를 LH에다 그냥 얹혀 놓고 그냥 이자놀이 해요, LH가?

답을 주세요.

○소위원장 전용기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위원님, 하나의 일레만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청년임대주택 호당 단가가 저희 지원 예산이 용자·출자 포함해서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가지고 신규 주택을 하나 만들어서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용자 예산, 출자 예산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그러니까 LH나 그런 지방공사가—한 35%, 40%의 비용을 자기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2년 치로 나누는 게 아니라 3년 치로 나눠서 조금씩만 주면 주택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자금 경색 같은 게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 치로만 해 주시면 저희가 결과로써 잘 보답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내가 계속 옆에서 들으니, 나는 그냥 옆에서 듣는데 이종욱 위원님은 25년에 제대로 사업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26년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다, 25년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26년 2년짜리 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하니 이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많이 답답합니다.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시원하게.

○소위원장 전용기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바라는 그런 답을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내일 공급 관계장관회의도 TF 킥오프를 하고 또 주간 단위로 차관 주재, 지금은 차관이 공식이니까 제 주재 TF도 매주 하면서 공급을 계속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유희부지하고 노후청사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발표했던 135만 호에 대해서 계속 전투를 하듯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가장 우려를 제시하는 부분이 전세 난민을 양산한다, 월세가가 많이 폭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입주 물량하고 관련이 되고 입주 물량이 금년은 충분하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이종욱 위원 실장님, 시간 없어요. 시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져온 예산이 5만 호에 대해서 1년 안에 다 준공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신축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이종욱 위원 준공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해 놓은 거 사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땅 사는 것부터 해서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공사 안 들어간 게 4만 8000호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1년 안에 다 끝내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면 제가 양해할게요. 그런데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개개의 사업별로 약정 체결된 물량들 다 체크해서 그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검토 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양해되는 거예요?

(「내일 의결해요」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소위원장 전용기 보류하는 게……

○이종욱 위원 아니, 가져오라니까요.

○김희정 위원 보류, 보류.

○이종욱 위원 보류해 주세요, 보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위원장님, 하나만 좀……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AI 상용화 지원사업.

○김희정 위원 아니, 말로 지금 설명 들어서 끝날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서류로 해서 오세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손명수 위원 김희정 위원님 제기하신 AI 사업 기본경비 부분은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AI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아직 충실히 잡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맞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AI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산업에 AI를 연결시키지, 접착시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지금 미국·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쳐진 상황에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도 460억 이 부분은 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국토위, 사실 AI 부분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AI가 앞으로 얼마나 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 부분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김희정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건은 사실 그게 이 예산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의결이 언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원래 오늘 마무리되면 오늘 하는 건데요. 마무리 안 되면 내일 해야 됩니다.

○손명수 위원 그렇지요. 원래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이것을 이종욱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집행 계획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욱 위원 아니, 손명수 위원이 납득하면 저도 납득해요.

○안태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안태준 위원 이종욱 위원님뿐이 아니라 저도 납득을 해야 편을 들어 드리지요. 어차피 납득을 좀 시켜 주셔야 거기에 보태서 편을 들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무슨 얘기를 보태 드리려고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태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융자 출자 부분에서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일부나 집행률 제고 사안 등을 성실하게 소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부대의견에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든 안을 내일까지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김 장관께서는 ‘부동산정책 잘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극히 일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여야가 공히 답답함을 느끼고 그만큼 9·7 공급대책이 실효성이 박약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건데.

차관님께 하나 여쭙볼게요. 9·7 공급대책 135만 호 발표는 했는데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실효적인 계획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9·7 공급대책에 대해서 이 정권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김희정 위원이나 김은혜 위원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왜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달 것을 안 했냐.

왜 10월 15일이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정책인데 보다 더 치밀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월 15일 역산해 가지고 언제부터 했기 때문에 9월 것 계산을 반영을 못 했다 어쩐다 그런 설득력 없는 변명까지 장차관이 자꾸 하게 됩니까? 지금 차관께서도 9·7 공급대책이 언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느냐 답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고 계신데.

자료 좀 잘 준비해 가지고 국토위 심사 끝날 때까지, 이종욱 위원께서 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렇게 또 끝까지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회의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준비 잘해 보십시오. 잘해 가지고 저희들도 주택공급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편성은 해 왔지만 심의하는 국회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 막히는 거 아닙니까. 심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자료 준비 잘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도읍 위원** 그리고 공급 정책 빨리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좀 내놓으십시오.

○**이연희 위원** 연말까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획 발표를 못 해요? 연말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 135만 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노후 공공청사,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그리고 유희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자세한 내역들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보통 공급대책이라고 하면 신규 택지 중심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발표 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예전에 제가 공공주택추진단장 할 때 발표했던 3기 신도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칠팔 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공급이, 아까처럼 신축 매입 임대라든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공급책들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거고 예전처럼 신규 택지 중심으로 발표하면 너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중심으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조차도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계장관회의, TF, 관계기관 회의를 거의 주 단위로 하면서 12월 중에는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치밀하게 해 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국민들 저항이 덜할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 말이에요. 아니, 발표하기 전에 보면…… 왜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정책 발표 안 하느냐고 누가 다그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이게 주택정책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고충을 알고 하니까 이제 좀 국토부가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믿고 신뢰하니까 국토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전용기**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AI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설명이 잘 되면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입 1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안에 아주 무리하게 계획안을,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가지고 오고 그런데 실제 실행 내역은 비어 있어요. 타입 2는 이제 2년 동안 가니까 좀 느슨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했던 것은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12월 2일 날 예산 통과시켜 놓고 한 달 안에 계획안 해서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속도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조일 때 가지고 오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좋으면 증액할 수도 있다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4개 사업입니다.

○**염태영 위원** 저 하나만……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염태영 위원** 아까 명확히 규명이 안 돼서 하나를 하면 사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지원사업에 여러 절차와 수용 가능성 보면 오늘 대부분 다 그래도 지역사업이고 또 국토부가 수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된 게 결국은 대전 대청호 오백리길 구간하고 은평구 요청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안한 것은 대전 동구 대청호 사업도 저는 여기 구간을 걸어 봤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고 은평구의 실버 테마공원도 좀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큰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다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지원 여부는 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볼 때 한번 보더라도 오늘은 일단 그것을 다 수용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아까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주민지원사업과 환경문화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저희들도 아까 검토를 하면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문화사업으로, 공모가 아닌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생활기반사

업으로 두 개를 받으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기반 사업으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수용,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순서에 다시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유감 표명뿐만 아니고 시행 조치하겠다고 차관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시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AI응용제품과 지금까지 논의했던 용자·출자 다가구 임대 관련해서도 명확한 액션플랜을 내일까지 준비를 해서 회의 전에 배포해 주시고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원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정책기획관 이상일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